

2016 총선공투본 참가 노동·진보 후보단 4대 의제 공동선언

변백선 기자 | 승인 2016.03.21 19:31

4대 의제 '노동계약 중단! 민중생존권 보장! 재벌체제 타파! 한반도 평화 실현!'



▲ ⓒ 변백선 기자

제20대 총선을 23일 앞두고 민주노총, 정의당, 민주연합당, 노동당, 녹색당 등 노동·진보 후보단이 '노동계약 중단, 민중생존권 보장, 재벌체제 타파, 한반도 평화실현'으로 요약되는 노동자·서민의 변화 염원을 선거 공간에서 적극 대변할 것을 선언했다.

노동자·농민·빈민 살리기, 박근혜정권 심판 2016 총선 공동투쟁본부는 21일 오후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4.13 총선에서 주류 야당이 아닌 진보에 의한 박근혜 정권 심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하할 것"이라며 "이런 의지를 담아 3월 26일 총선 투쟁 승리 범국민대회를 전국 동시다발로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공동대표단 인사말을 통해 "지난 3년간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은 노동자, 민중들을 탄압하고 가진자들만을 대변하는 독재정권이였다. 이번 총선은 정작 필요한 법은 제정하지 않고 만들지 말아야 할 테러방지법 등을 만들어내는 19대 국회를 20대 총선 진보진영 출마자들이 승리해서 박근혜 정권의 권력을 약화시키는 것에 의미가 있다"며 "총선공투본 이름으로 출마한 후보들의 건투를 빌고 민주노총이 최대한 할 수 있는 조직적 영향으로 승리 이끄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순애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은 "선거시기 처음에는 잘 하겠다고 약속들을 많이 하는데 이번만큼은 뽕뽕 뭉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힘든시기 잘 이겨내고 꼭 승리하자"고 말했다.

김영표 빈민해방실천연대 의장은 "기초법개정, 노점단속중단, 순환식 개발 시행,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폐지 등 빈곤문제를 함께 할 동지들을 적극 지지하고 이번 선거에서 적극 요구해 나가고 선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 © 변백선 기자

총선공투본은 "주류 야당들은 노동자·서민의 변화 염원을 담을 수단이 못된다. 전두환, 노태우, 정부에서 중용됐고 2012년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 공신의 일원인 보수적 인물이 이끌고 있는 더민주당, "경제는 진보, 안보는 보수"를 표방하며 새누리당과 더민주당 사이에서 '보수적 중도층'을 기반으로 삼고자 하는 국민의 당은 새누리당과 종종 각을 세울 때도 있지만 대체로는 기업주들의 이익을 거스르지 않는다. 그래서 이 정당들은 노동자·서민의 진정한 이해관계를 대변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비록 소속 정당들은 다르지만, 노동자·서민의 진보적 변화 염원이 선거 공간에서 최대한 표현돼야 한다는 점에서 한마음 한뜻"이라며 "우리 후보들은 이런 총선공투본의 핵심 의제를 최대한 많은 유권자들에게 알리고 지지를 모으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변백선 기자 n7349794@naver.com